

민생물가 특별관리  
관계장관 TF  
(공개, ⑤번 안건)

# 반복담합 근절방안

2026. 4. 23.

공정거래위원회

# 반복담합 근절방안

## 1 검토 배경

-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,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임
  - 특히, 최근 설탕, 인쇄용지 담합 사례는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인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
-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,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

## 2 주요 추진 방안

### 1.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배상책임 부여

- ① 반복 담합시 과징금 가중 강화 및 자진신고 감면 혜택 축소
  - (과징금 가중)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% 가중 (과징금 고시 개정)
    - \* (현행)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%~80% 가중  
(1회 반복: 10~20%, 2회 반복: 20~40%, 3회 반복: 40~60%, 4회 반복 60~80%)
  - (감면혜택 축소)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 박탈\*
    - \* (1순위) 과징금 면제, (2순위) 과징금 50% 감경 혜택 박탈
  -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1/2로 축소\* (공정거래법 개정)
    - \* (1순위) 과징금 면제 → 과징금 50% 감경, (2순위) 과징금 50% → 25% 감경

## ② 담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부과

- (내부감시체계 구축명령) 담합 재발방지를 위해 CP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 운영\*토록 하고,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\*\* 시정조치

\*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·운용하고,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등

\*\* 최근 설탕담합 건은 3년간 설탕 가격 변동 현황을 연 2회 서면보고하도록 명령

- (임원해임·직무정지명령) 담합 사업자에게 해당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검토 (공정거래법 개정사항)

－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, 담합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해소

\* 임원해임·직무정지명령은 국내 금융법(자본시장법, 외부감사법) 및 해외 경쟁법(영국, 미국, 호주 등)에 도입되어 활용중

- (구조적 조치)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

## ③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이 용이하도록 소송 제도 개선

- (단체소송 확대) 위반행위 금지·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 (소비자기본법 개정사항)

\*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도 도입시에는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집단소송제를 활용하고, 단체소송은 예방적 금지 청구 도입 등을 지속 추진

- (자료제출명령 도입)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, 손해액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한 경우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제도화 (공정거래법 개정)

## 2. 담합 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

□ (내용) 개별법상 등록·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, 반복 담합시 등록·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 도입

○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도입된 사례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

< 참고 사례 : 타법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등록취소 등이 규정된 경우 >

개별법	내용
건설산업기본법	건설사업자가 <b>가격·거래제한·입찰 담합</b> 을 반복하여 9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 처분 받은 경우 <b>건설업 등록을 말소</b> (제83조 제13호)
공인중개사법	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<b>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반복</b> 하여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받은 경우 관련 <b>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</b> 가능(제38조 제2항 제11호)

□ (방식)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 취소, 영업정지를 요청하고, 요청받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 검토

< 법 개정 방식 >

법	개정할 내용
공정거래법	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담합을 반복한 경우(예: 5년간 2회), 공정위는 관계부처 장관에게 관련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
개별법	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, '공정위가 영업정지·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'를 추가

## 3.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

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확대 (가격담합 등 포함)

○ 현행은 입찰담합\*시에만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→ 조달청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(국가계약법)

\*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(경고 0.5, 시정명령 20, 과징금 25, 고발 30점)

⇒ 非입찰 방식의 담합(가격·생산량 담합) 시에도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\*하도록 대상 확대 (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)

\* 예: 5년간 경성담합(입찰·가격·생산량 담합)으로 받은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

## ② 반복 담합시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

- 현행은 담합 반복시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존재\*

\* 5년간 시정명령(2.0점)만 2회 부과받은 경우 누적별점 5점 미만

⇒ 반복 담합시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 개선 (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)

## ③ 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상향

-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담합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차등화

\*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: 2년, 담합을 주도한 자: 1년, 단순 가담자: 6개월

⇒ 담합 주도자(1년 → 1년 6개월) 및 단순 가담자(6개월 → 1년)에 대한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하여 담합 재발 억제 (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)

## 3 향후 추진 계획

대책	시기	추진주체
• 과징금 가중 강화(과징금 고시 개정)	'26.4월	공정위
• 반복담합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(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)	'26.上	공정위
•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(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)	'26.下	공정위
• 소비자 단체소송 확대 도입 관련 연구용역 완료	'26.下	공정위
• 담합 관련 분야 등록취소·영업정지 및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(공정거래법·개별법 개정안 마련)	'26.下	공정위, 관계부처
•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 검토 및 방안 마련	'26.下	공정위
•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상향(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)	'26.下	재경부